

이슈페이퍼

30대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양정승 · 반가운

30대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양정승 · 반가운

30대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양 정 승¹⁾ · 반 가 윤²⁾

〈목 차〉

I. 배경 및 문제점	2
II. 조사 및 분석 결과	3
III. 정책 제언	14
IV. 기대효과	21
참고문헌	23
[부록]	2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고용률은 2009년도에 저점을 찍은 후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양상을 보임. 그러나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용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35~39세 연령층의 고용률 감소 현상이 두드러짐. 이에 대한 원인으로 IMF 세대라는 특정 코호트 효과인지를 우선 검토하였으나 문제의 주된 원인이 고졸과 중졸이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저하에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러한 원인으로서는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증가하고 고졸과 중졸이하 여성들의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관련한 기존 여성정책을 검토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 주제어: 30대 후반, 고용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성 노동 시장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E-mail: jseyang@krivet.re.kr)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E-mail: gwban@krivet.re.kr)

I. 배경 및 문제점

최근 들어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9년 2월 57%까지 떨어졌던 고용률은 2012년 3월 현재 58.6%로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용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2년 3월 현재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2%p가 감소하여 다른 연령층이 모두 증가한 데 반해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30~34세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증가한 반면, 35~39세 취업자 수는 4.8% 감소하여 30대 후반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에서도 30~34세 연령층은 전년 동월 대비 0.7%p 증가한 반면 35~39세 연령층은 2011년 8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9%p 하락하였다(박세정, 2012).

이렇게 타 연령층에 비해 30대 후반의 고용개선이 부진한 이유로는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것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장기적 지속, 또한 상대적으로 호경기에 대학생활을 함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준비가 후속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인적자본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세정(2012)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코호트별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2011년 30대 후반에 해당하는 1972년~76년생 코호트는 다른 코호트들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낮은 편이며, 종사상 지위별로도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음을 보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해당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회복 정도가 매우 저조하고, 저학력층의 경우 상용직 비중보다 높은 임시일용직 비중을 보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고령층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에 그동안 충분히 분석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30대 연령층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의 30대 후반 고용률의 하락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0대 후반 고용률 변화를 분해하여 그 원인을 좀 더 명확히 밝히고, 그러한 현상을 발생시킨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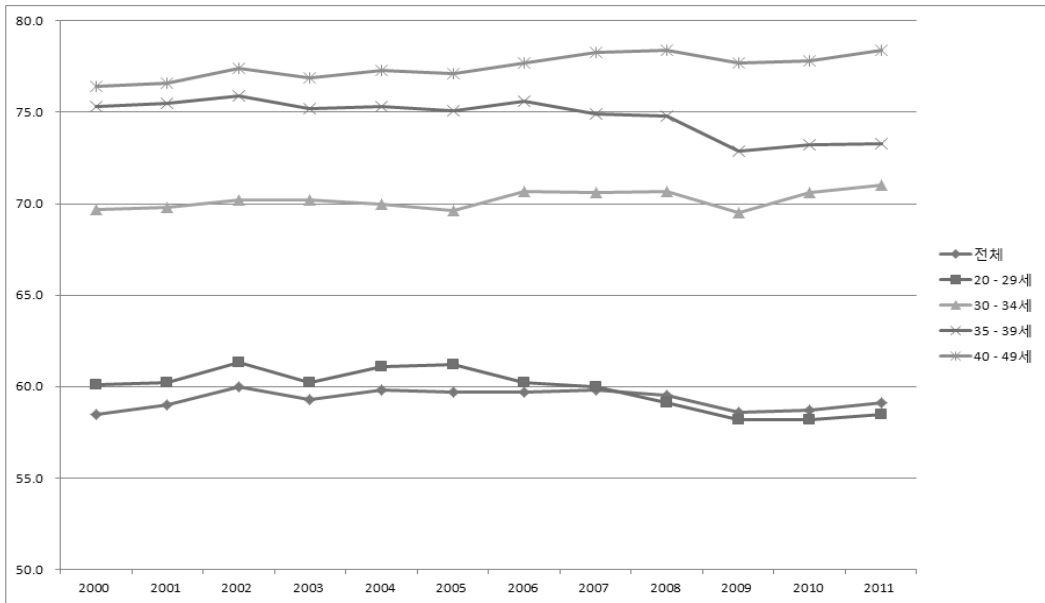
II. 조사 및 분석 결과

1. 30대 후반 노동시장의 변화

IMF 세대라는 특정 세대 효과를 분석하기 이전에 30대 후반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용률을 중심으로 다른 연령대의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은 2000년 이후 각 연령별 고용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2000년 이후 연령별 고용률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체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30대 후반(35~39세)과 청년층(20~29세)의 고용률은 반대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층(60세 이상)의 고용률도 그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동 기간에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고용률이 가장 높았던 2002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1년에 청년층은 2.8%p, 고령층은 2.2%p, 30대 후반은 2.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상황 악화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고 전세계적인 현상인만큼 놀랍지는 않으나 30대 후반의 고용상황 악화는 이들의 경우 생산성이 인생의 정점 직전에 있는 세대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반면 30대 초반(30~34세)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 30대의 문제가 주로 30대 후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30대 후반 노동시장의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30대 후반을 보다 세분화하여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현재의 30대 후반의 노동시장의 위기가 주로 여성에 편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학력 계층에 편중되어 있는지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해분석이 유용하다.

근로자 집단 i 의 취업자수를 E_i , 실업자수를 U_i , 비경제활동인구를 N_i 라고 할 때 전체 고용률 e 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e = \frac{\sum_i E_i}{\sum_i (E_i + U_i + N_i)} \quad (1)$$

한편 i 집단의 실업률을 u_i , 경제활동참가율 p_i , 인구비율을 ϕ_i 라 한다면, 이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Delta e = \sum_i \{ (1 - u_i) p_i \Delta \phi_i + (1 - u_i) \phi_i \Delta p_i - \phi_i p_i \Delta u_i \} \quad (2)$$

식 (2)는 i 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증가할수록 고용률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반대로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단순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률의 증가는 집단들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인구비율의 변화분들의 가중합으로 볼 수 있고, 고용률 증가의 원인을 그 요인별로 분해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은 2001년과 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두 시기 간의 35~39세 고용률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³⁾

3) 이러한 장기적 분해의 경우 단기적 변동 요인에 의한 오차(error)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다년도의 값을 평균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1년이라는 특정 해의 데이터를

<표 1> 35~39세 고용률 변화의 분해(2001년~2011년)

(단위: %p)

	전체	남					여				
		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계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용률	-2.28	-0.05	-4.21	-6.55	4.54	6.18	-2.23	-6.09	-4.45	2.85	5.46
실업률	-0.16	0.01	0.01	-0.29	0.03	0.25	-0.16	-0.01	-0.15	-0.02	0.01
경제활동참가율	-2.47	-1.05	-0.49	-0.71	0.03	0.13	-1.42	-0.72	-1.57	-0.32	1.19
인구비율	0.35	0.99	-3.74	-5.55	4.48	5.80	-0.64	-5.36	-2.72	3.19	4.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10년간 고용률은 2.28%p 감소하였는데, 실업률변화는 이 중 0.16%p 고용률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실업률은 낮아져 고용률을 0.01%p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실업률은 0.16%p의 고용률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시장상황은 30대 후반 여성의 취업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작동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여성 실업률이 고용률을 감소시킨 효과의 대부분은 고졸 여성의 실업률 상승 효과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47%p의 고용률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10년간 고용률 감소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의 폭이 큰데 여성의 경우에는 대졸자만이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고용률 상승에 기여하였고, 중졸 이하와 고졸, 전문대졸 여성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여 고용률 감소를 가져왔다. 특히 중졸이하와 고졸 여성의 경우 2.49%p의 고용률 감소를 야기하여 현재 30대 후반 고용률 감소의 주된 원인이 여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에 의한 고용률 감소는 1.05%p인데, 전문대졸과 대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효과를 중졸이하와 고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효과가 초과하여 전체적으로는 고

사용하면 장기적인 경향이 아닌 2011년에 고유한 경기적 변동요인의 영향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시의성이기 때문에 다년도의 평균값을 사용하기 보다는 1개 년도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가령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값을 평균할 경우 2011년 보다는 2010년 주변으로 취한 것이기 때문에 2010년의 값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1년의 경우 2010~2012년 데이터를 평균해야 하는데 아직 2012년 연간 데이터는 활용가능하지 않다. 시의성을 위해서는 경기적 변동요인에 의한 오차를 감수하더라도 2011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용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도 중졸이하와 고졸자 시장상황 악화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구비율의 변화는 0.35%p의 고용률 개선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하겠다.

2. 30대 후반 고용률 하락의 중장기적 효과

이러한 최근의 30대 후반의 고용악화의 원인으로 IMF 세대의 코호트 효과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2012년 현재 30대 후반인 1973년~1977년생 들은 IMF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에 대학을 다니고 IMF 경제위기가 터진 직후 대학을 졸업한 세대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IMF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출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쉽게 찾지 못해 하향취업을 하게 되고, 이후 자신이 원하는 직장으로서의 이직을 위해 꾸준히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시도를 하나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용률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IMF 경제 위기 이전에 대학을 다닌 이들의 경우 당시의 청년 취업 여건이 양호하였기 때문에 취업 준비가 후배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후배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고용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Kahn(2010)과 Oreopoulos et al.(2012)는 각각 미국과 캐나다를 대상으로 경기침체의 대학 졸업이 이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는 임금에 부정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reopoulos et al.(2012)은 이러한 효과는 10년 정도가 지나면 사라진다고 주장한 반면, Kahn(2010)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여 장기 지속 여부에서는 상충되는 결과를 제시했다. 직업탐색이론에 의하면 대학 졸업 시 경기 상황으로 인해 하향 취업을 하였다면 꾸준히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시도를 하여 결국은 자신의 생산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불이익의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고용주 학습모형에 따르면 경력과 더불어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보다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생산성에 근접하는 임금을 받게 된다(Stiglitz, 1975; Lange, 2007; Farber and Gibbons, 1996; Altonji and Pierret, 2001). 따라서 고용주 학습모형에 기초하여서도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Gibbons and Waldman(2004, 2006)은 경기침체 시 하향 취업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량과

기술보다 더 적은 훈련과 기술습득 기회만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대적으로 호경기 시 대학을 졸업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경력을 시작한 세대보다 인적자본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이동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다는 가설에 대하여 상반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채창균(2006)은 노동이동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효과가 있음을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한 반면 박재민 외(2011)와 이병희(2003) 등은 각인효과(scarring effect)에 의해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즉, 중소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장기적으로 대기업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선행연구들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위기 시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의 장기적 불이익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임금데이터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사는 임금이 아닌 고용의 문제이므로 서구의 선행연구들을 따르지 않고, 고용률 추이의 코호트들별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용에 장기적인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보고자 하였다.

<표 2>는 2011년도의 연령기준으로 세대를 5년 단위로 나눈 후 세대별 고용률의 생애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각 행은 세대를 의미하며, 각 열은 각 세대의 연령을 의미한다. 가령 '30대 후반' 세대의 35~39세일 때의 고용률은 73.3%이며 2011년의 고용률이다. '40대 초반' 세대의 35~39세일 때의 고용률은 75.6%이며 이는 5년 전의 데이터인 2006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30대 후반 세대의 고용률은 40대 세대보다는 2%p 정도, 50대 세대보다는 4%p 정도 낮은 수준이지만 60대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30~34세 고용률은 세대 간 격차는 존재하지만 현재 30대 후반 세대만 특별히 고용률이 나쁘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40대 초반 보다는 오히려 1%p 정도 높았다. 오히려 25~29세의 고용률은 세대가 흐름에 따라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년노동시장 악화문제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30대 후반 세대와 40대 초반 세대만을 비교한다면, IMF의 여파로 30대 후반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당시인 25~29세 고용률은 40대 초반 세대보다 0.8%p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의 징후가 있지만, 30~34세일 때는 이미 40대 초반 세대의 고용률을 추월하여 장기적인 경제위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후 다시 35~39세일 때 고용률이 추락한 것은 경제위기의 장기적인 효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2011년 연령 기준 세대별 고용률의 생애 경로

(단위: %)

세대구분	연령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전체									
20대 초반	43.5								
20대 후반	49.2	69.7							
30대 초반	52.0	68.5	71.0						
30대 후반	59.4	66.7	70.7	73.3					
40대 초반	59.1	67.5	69.8	75.6	78.4				
40대 후반	54.5	65.5	72.6	75.5	78.4	78.4			
50대 초반	56.6	60.0	72.7	77.9	76.6	77.0	74.7		
50대 후반		59.4	69.7	77.5	80.6	76.5	72.6	67.4	
60대 초반			67.5	73.8	77.7	78.1	70.3	63.2	55.1
남자									
20대 초반	37.2								
20대 후반	42.7	71.6							
30대 초반	44.7	72.6	87.9						
30대 후반	54.3	77.8	89.0	91.6					
40대 초반	54.7	84.7	91.2	92.2	92.2				
40대 후반	54.3	88.2	95.1	92.1	92.1	90.9			
50대 초반	65.3	83.7	95.5	95.4	91.0	90.6	88.2		
50대 후반		87.7	92.9	96.0	95.4	89.6	87.6	81.7	
60대 초반			93.4	93.1	94.9	94.1	85.1	77.4	69.6
여자									
20대 초반	48.2								
20대 후반	53.9	67.8							
30대 초반	57.1	64.3	53.2						
30대 후반	63.0	55.2	51.6	54.1					
40대 초반	62.1	49.9	47.8	58.4	64.2				
40대 후반	54.7	42.0	48.9	58.4	64.3	65.6			
50대 초반	50.1	36.4	48.7	59.6	62.0	63.3	61.2		
50대 후반		31.2	45.5	58.1	65.2	63.2	57.6	53.2	
60대 초반			40.6	53.8	59.8	61.4	55.3	49.1	41.3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이러한 고용률의 흐름을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더욱 뚜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지속적인 청년노동시장의 악화 양상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40대 후반 세대의 경우 88.2%에 달했던 25~29세 고용률이 현재 20대 후반 세대의 경우 71.6%로 16.2%p 추락하였다. 30대 후반 세대와 40대 초반 세대의 격차는 25~29세일 때 6.9%p 이던 것이 30~34세일 때는 2.2%p로 좁혀지고 35~39세일 때는 불과 0.6%p로 그 격차가 축소되었다. 또한 35~39세 고용률은 일정하게 하락하는 추세여서 30대 후반의 고유한 코호트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종합하면 경제상황은 세대를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부정적으로 흐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이동에 의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간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30대 후반 남성 고용의 문제는 IMF 세대라는 특정 코호트의 문제가 아니라 30대 후반 남성 고용시장의 추세적인 악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세대의 젊은 여성에 비해 현재 세대 젊은 여성의 뚜렷한 고용률 증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용률 증가 추세는 30~34세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젊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시기는 이전 세대보다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고학력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30대 후반 세대의 여성은 이전 세대의 20~24세 높은 고용률과 현재 젊은 세대의 25~29세, 30~34세의 높은 고용률 모두를 보이고 있는 과도기적 세대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젊은 세대처럼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지도 않았고, 이전 세대처럼 노동시장에서 이른 나이에 물러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30대 후반이 이전 세대에 비해 25~29세일 때, 그리고 30~34세 일 때 고용상황이 나빠 보이지 않는 것은 여성의 고용상황 개선 효과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고용상황은 이들이 35~39세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악화되어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4%p 이상 고용률이 낮은 상황에 머물러 있다. 즉 최근의 30대 후반 고용률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30대 후반 여성들의 고용률 하락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과 <표 1> 및 <표 2>에서 확인 가능했던 지금까지의 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30대 후반 노동시장은 남녀 모두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의 30대 후반 고용률 감소는 주로 여성에 집중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남성의 경우 그 크기가 크지 않았다. 또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 세대와의 고용률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

습이다. 따라서 적어도 남성 고용률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IMF 세대라는 코호트 효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저하가 가장 큰 요인이고 그 중에서도 중졸이하와 고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가 주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은 30대 후반 고용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 30대 후반 여성의 코호트 문제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2011년 연령 기준 세대의 생애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경로를 대졸 이상과 고졸, 중졸 이하의 학력층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⁴⁾ 먼저 고졸과 중졸 이하 학력층의 여성들을 살펴보면 현 30대 후반 세대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이전 세대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이전 세대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고졸과 중졸이하 여성들의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졸이하의 경우 노동시장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 때 이전 세대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30~34세 때는 40대 후반 이전 세대들보다는 다소 낮지만 40대 초반 세대와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5~39세 때는 40대 초반 세대보다 12%p 가량이 낮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의 경우 25~29세 때는 오히려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30~34세 때에도 이전 세대들과 동일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의 참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IMF 효과라기보다는 여성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큰 관련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25~29세의 미혼 여성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30~34세에 이전 세대와 비슷해지는 것은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노동시장에서 육아로 전환하는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35~3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전 세대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결국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육아에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는 시점이 지연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업률 증가로 표현되는 고졸과 중졸이하 여성 노동시장의 여건 악화도 이들의 재진입 시기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층을 살펴보면 30대 후반 여성 세대와 이전 세대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실업률 추이를 보여 특별히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보다는 최근의 청년층 여성의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이들이 향후 여성 고용률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 참가율 측면에서는 30대 후반 세대와 30대 초반 세대 대졸이상 여성들은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30대 후반 세대의 경우 25~29세와 30~34세 시기 뿐만 아니라

4) 전문대졸은 편의 상 생략하였다.

<표 3> 2011년 연령 기준 세대별 여성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생애 경로

(단위: %)

학 력	세대구분	연령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중 졸 이 하	실업률									
	20대 초반	10.5								
	20대 후반	10.8	10.5							
	30대 초반	9.7	11.1	4.9						
	30대 후반	4.5	8.4	4.9	3.2					
	40대 초반	1.7	2.0	2.4	2.1	2.4				
	40대 후반	1.6	1.0	0.8	2.8	2.1	1.3			
	50대 초반		1.0	0.7	0.9	2.3	1.7	1.4		
	50대 후반			0.8	0.6	0.6	1.8	1.4	1.3	
	60대 초반				0.7	0.6	0.5	1.9	1.2	1.5
	경제활동 참가율									
	20대 초반	33.3								
	20대 후반	48.1	44.7							
	30대 초반	45.3	37.3	50.0						
	30대 후반	48.1	40.5	53.0	54.3					
	40대 초반	54.2	40.9	53.9	66.6	68.5				
	40대 후반	50.7	42.4	57.2	67.0	70.8	71.4			
	50대 초반		36.9	57.2	66.8	72.8	68.8	65.6		
	50대 후반			52.5	66.3	72.2	70.0	62.8	56.4	
60대 초반				60.3	68.1	67.4	60.4	53.2	45.4	
고 졸	실업률									
	20대 초반	7.0								
	20대 후반	8.5	5.5							
	30대 초반	7.5	5.5	4.8						
	30대 후반	3.8	4.0	3.0	2.7					
	40대 초반	4.7	1.8	2.5	2.1	2.3				
	40대 후반	4.9	2.0	0.9	2.1	1.8	1.5			
	50대 초반		1.6	1.3	0.8	2.6	1.7	1.7		
	50대 후반			1.3	1.1	0.8	2.5	1.6	1.4	
	60대 초반				1.3	1.2	0.5	3.2	0.8	2.7

학 력	세대구분	연령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고 졸	경제활동 참가율									
	20대 초반	37.7								
	20대 후반	45.3	60.4							
	30대 초반	52.4	56.6	48.3						
	30대 후반	62.0	50.0	48.4	53.4					
	40대 초반	63.5	45.4	47.9	59.8	68.5				
	40대 후반	59.1	38.2	45.8	60.1	65.7	68.1			
	50대 초반		34.3	42.1	55.5	59.5	62.0	60.2		
	50대 후반			33.9	48.3	58.4	56.4	52.2	49.9	
	60대 초반				38.7	43.6	50.6	46.0	42.1	33.3
	대 졸 이 상	실업률								
20대 초반		9.0								
20대 후반		11.9	4.0							
30대 초반		6.5	4.3	2.2						
30대 후반		6.4	3.5	1.6	1.2					
40대 초반		11.9	2.0	1.9	1.4	1.3				
40대 후반		23.5	3.5	1.3	1.5	1.0	1.3			
50대 초반			4.0	1.6	0.6	0.7	1.1	1.3		
50대 후반				1.6	3.2	2.0	0.6	1.5	1.2	
60대 초반					3.1	2.8	3.5	3.5	3.3	3.0
경제활동 참가율										
20대 초반		69.8								
20대 후반		71.9	77.8							
30대 초반		79.6	75.3	63.3						
30대 후반		79.5	69.7	60.6	59.5					
40대 초반		79.8	66.2	52.0	56.3	58.7				
40대 후반		67.2	57.3	53.1	49.5	60.4	58.5			
50대 초반			48.6	48.3	55.8	49.1	60.1	58.1		
50대 후반				41.6	40.2	51.9	57.9	52.0	50.2	
60대 초반				33.6	37.7	45.3	45.9	38.3	2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35~39세인 현재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이전 세대보다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전 세대와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연령 증가와 더불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고졸 여성과 마찬가지로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이 늦어지는 대졸 여성들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성 노동시장의 추이를 정리하면, 이전 세대는 25~29세 시기와 30~34세 시기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로 특징 지워 진다면, 현 30대 후반 세대는 20대와 30대 초반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다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이전 세대의 경우 30대부터 빠르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면, 현 30대 후반 세대는 고졸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이 이전 세대보다 지연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들의 경우 재진입 지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여성들이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활발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졸 이하의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여건 악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나 <표 1>에서 본 것처럼 학력 구성상의 비중이 하락하여 전체 고용률 하락에 대한 기여도는 고졸여성보다 크지 않다.

3.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변화의 시사점

젊은 층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의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여성의 고학력화 그리고 평균결혼연령이 늦춰졌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전 세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성역할에 대한 편견으로 상대적으로 현재의 30대 후반 세대 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모든 세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전형적인 패턴인 M자 형태의 곡선을 관찰할 수 있으나, 이전 세대의 경우 현재의 30대 후반 세대보다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다가 보다 빠른 나이에 재진입한 데 비해, 현재의 젊은 세대의 경우 노동 시장 이탈연령은 갈수록 늦어지고 있고, 30대 후반의 경우 재진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2>의 고용률 패턴을 보았을 때, 25~29세일 때와 30~34세일 때의 고용률이 세대가 지날수록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인식과 성역할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결혼 시기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또 40대 이후 세대가 현재 세대보다 비교적 이른 35~39세 때에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으로 돌아온 것은 이들이 결혼을 상

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하고 출산과 양육의 부담 또한 상대적으로 일찍 마쳤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30대 후반 세대는 결혼이 늦추어 지면서 출산과 양육 시기 또한 늦어졌을 것이고, 그러한 연유로 아직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록의 [부도 1]에서는 세대에 따라 학교급별 자녀보유 비율 및 출산연령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로 인한 고용률 감소 효과가 고졸과 중졸이하 여성층에 집중되었던 점, 고졸과 중졸이하 여성층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 점, 또한 실업률과 일자리의 질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보육비 부담일 것으로 생각된다. 고졸과 중졸이하 여성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보육비용은 여성들의 유보임금을 상승시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스스로 양육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정책 제언

지금까지 최근 노동시장에서 30대 후반 연령층의 고용개선이 부진한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30대 후반 고용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 30대 후반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이들 연령층의 고용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30대 후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에 있다. 특히 고졸 이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는 장기적인 고용률 감소분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였다. 셋째, IMF 경제위기에 노동시장을 진입했거나 대학을 다닌 세대라는 점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단기적으로 존재했으나, 30대 후반 연령층 남성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넷째, 현재의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 악화는 IMF 세대의 코호트 효과가 아니라 늦은 결혼과 출산, 저학력 여성 노동시장의 여건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장기적인 추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30대 후반 여성, 특히 저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는 것이 현재의 30대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선결과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어떠한 여성정책들이 있었는지 「제3차 여성기본계획(2012)」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여성정책은 크게 여성인력 활용, 여성의 권익보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로 구분된다. 2012년 기준 20개 부처에서 관련한 3대 과제에서 201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 기준 총 예산은 35,737억원이며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다. 여성인력 활용 과제가 전체의 93%를 차지하며 이 역시 전년 대비 26% 예산이 증가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산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참고로 2012년은 8개 사업이 3개 사업으로 통합되고, 11개 사업이 종료하였으며, 13개 사업이 신규추진 되었다.

<표 4> 2012년 여성정책사업 과제별 예산현황

(단위: 개, 백만원)

정책목표	연도	2011년		2012년	
		사업수	예산	사업수	예산
합계		204	2,896,937	201	3,573,698
1. 여성인력 활용		81	2,644,709	77	3,337,570
2. 여성의 권익보호		84	229,003	81	214,603
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39	23,225	43	21,525

자료: 「제3차 여성기본계획」, 여성가족부, 2012

위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정책의 대부분은 여성인력 활용 정책이며, 예산의 증가 역시 이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여성인력 활용 정책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까? 역시 「제3차 여성기본계획(2012)」를 참고하여 2011년 여성인력 활용 정책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여성 일자리 지원 인프라 강화로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09년부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운영('11년 현재 98개소)하고 있으며 '11년 기준으로 117,370명의 취업성과를 거두었다. 이중 40대 이상 86,299명으로 73.5%에 달해 40~50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 여성 일자리 관련하여서도 사회서비스 분야 및 시간제일자리 등을 통해 일자리 연계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하여 여대생 커리어 개발 사업

으로 67,593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WISE 프로그램)으로 54,307명, 문화관광분야 여성리더 양성(23개 과정)으로 1,250명의 취업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62개 승인 사업장에 신규(상용)시간제근로자 임금의 50%를 지원(월 40만원 한도, 1년간)하는 사업 역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취업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선 보육료 지원 및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123만건에서 197만건으로 확대하였다.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11.7월)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도입('11.9월)하는 등 남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제3차 여성기본계획(2012)」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사업에 대해 보완할 점으로 20~30대 여성인력 활용 정책대응이 미흡했음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요컨대 여성정책이 여성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소기의 성과를 일정부분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고령자에 비해 20~30대 후반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도별 시행계획을 살펴봐도 본 연구의 주요한 정책대상자인 30대 후반, 특히 저학력 여성에 대해 특화된 구체적 정책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정책대상자인 30대 후반 저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이 여성노동시장 정책을 학력별 나이별로 명확히 구분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즉 본 연구의 정책제언들은 기존의 일반적 여성정책 범주에 있는 것들이다. 또 본 연구의 정책제언이 구체적인 정책집행 수준까지 이르지 못한 한계 역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여성정책의 방향을 보다 세분화된 정책수립의 필요성으로까지 환기시켰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 제안 1) 성별, 세대별, 학력별로 보다 세분화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의 여성정책 검토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30대 후반 저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초점을 두는 정책은 현재 없다. 다만 정책대상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과 세분화하는 것은 비용과 효과성 면에서 대체관계(Trade-off)를 가지게 되므로 30대 후반 저학력 여성으로까지 정책대상을 구분하게 된다면 세대-학력-성별, 3차원으로 정책대상이 구분

되어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감이 없지 않다. 다만 기존의 관련 정책들에서 최소한 여성에 특화된 정책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여성정책 역시 정책집행력과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세대 또는 학력을 구분하여 한 차원 정도는 더 정책대상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업 내 직업훈련 정책만 하더라도 여성, 특히 저학력 여성에 특화되어 개발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존 관련 정책의 경우 직업훈련 지원의 요건, 기간, 금액에 있어 남녀노소, 학력수준 등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성, 특히 저학력 여성에 보다 특화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여성정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기존 정책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즉 여성의 이슈가 중요하다고 해서 기존 정책의 근간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단순히 예산이 증액되거나 사업이 추가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할 경우 오히려 포괄적으로 접근할 경우의 정책집행 효율성만 저하되는 결과가 일어나기 쉽다. 금재호(2011)의 경우 고용보험기금과 고용보호사업 중 여성부문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주장하는데, 이를 위해 기존의 고용보험제도 자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틀 내에서 사업과 기금의 분류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1차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에 여성, 청년, 고령자 등의 계층별 축을 하나 더 추가하여 2차원 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학력 여성 직업능력 개발 정책 역시 관련한 2차원 정책 맵에서 포지셔닝 될 수 있다면, 기존보다 효과성 높은 정책 집행과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언 2) 보육지원 정책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질적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저학력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기본적으로 보육 문제로 보고 있다. 즉 저학력 여성의 일과 보육 병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기된 30대 후반 저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기존의 보육정책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때 보육정책의 초점이 예산의 확대라는 양적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기존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의 전환이라는 질적차원의 접근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양적차원에서 보면 대표적 정책 제언으로 현재 보육료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확대는 양육수당 등 다른 정책수단과의 조정 문제, 정책 대상 계층의 범위, 정책 대상 영유아의 나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산 확보 및 정책 대상 선정의 문제 자체가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정치적인 영역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질적차원의 접근은 정책집행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정책제언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는 지점이다. 우선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의 시설보육 지원은 지나치게 시설중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보육시설에서 부모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하고 예산확대가 실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의 처우 향상으로도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보육수요자 입장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보다 수요자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시간제 보육시스템 구축이 대표적이다. 물론 현재에도 시간제 보육이 제도상 존재하나 실행의 수준은 미미하다. 종일 보육에 비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간제 보육이 보다 선호되겠지만 공급자인 보육기관이 이를 꺼리는 실정이다. 지불 능력이 취약하고 비정규직 지위가 많아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저학력 여성 입장에서는 시간제 보육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기존 보육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거래비용을 저하시켜 보다 충분한 서비스가 공급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에서 제공되는 많은 보육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 전에 그 전문성과 품질 등을 명확히 알고 구입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정보비대칭 상황에 직면하여 막대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저학력 여성의 경우 고학력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중임금이 낮아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크다고 하더라도, 민간에서 구입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면 그만큼 노동시장 참여의 유인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적절한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자격제도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저학력 여성에만 한정하지 않고 생각해본다면 대표적으로 가사 도우미의 전문성과 품질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높은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면에 국외출신 가사 도우미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통일된 계약서 양식, 중

개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가 있다.

■ 제안 3) 보육지원 정책이 선별적으로 보다 집중될 필요가 있다.

저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을 보육지원 정책을 통해 완화하는 것이 여성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논의와는 다르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최근 30대 후반 저학력 여성의 낮아진 경제활동 참여는 단지 기존 M자형 경력단절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즉 만혼과 늦어진 첫출산 연령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므로 노동시장 정책만 놓고 본다면 정책개입의 필요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저학력 여성의 경우 보육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 시기가 몇 년 늦어지는 것이 과연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저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은 기업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기업은 협업을 통해 생산활동을 하므로 저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은 그 자체로 기업의 생산성향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여성의 경력단절에 공통되는 사항이므로 정책 우선순위 차원에서조차 과연 중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즉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일 수 있지만 과연 저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이 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오히려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고학력 여성의 L자형 경력단절 곡선을 우려하고 있다. 보육보다 자녀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고학력 여성이 출산 이후 아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현상은 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의 유실이라는 측면에서 경제 전체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또 금재호(2011)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은 보육이라면 고졸 이하 저학력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유도하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보육서비스의 지원 확대는 재정 부담의 증가뿐만 아니라 관련 직종의 인력공급 과잉으로 인해 저임금 여성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이 미흡한 상황에서 보육서비스의 확대가 노동시장 참여자의 의존임금을 감소시켜 특정 직종 일자리에 대한 경쟁 심화로 이어진다면 관련 직종의 실질임금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의 참여가 지연된다는 것이 개인차원에서 어떠한 비용 지불도 없이 단순히 지연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생애경로에

서 생산성의 최정점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을 시기에 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고 뒤늦게 다시 저점에서 시작하는 지연된 M자형의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후기 임금고점이 이전 세대보다 낮은 지점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짧아진 기대근속연수는 그만큼 인적자원개발투자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킬 것이다. 따라서 저학력 여성의 경력단절을 단순히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일 수 없다. 요컨대 저학력 여성 전체 차원에서는 정책적 우선순위가 밀리더라도 노동시장 참여 및 경력개발의 의지가 강한 저학력 여성의 경우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선별적 지원의 경우 임금하락의 부작용은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즉 저학력 여성 보육지원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선별하여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이 수립·집행될 필요가 있다.

■ 제안 4) 보육지원 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제안 3)에서 보육지원 정책을 선별적으로 수립·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저학력 여성에 관련된 정책을 효율성의 차원에서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보다 포괄적인 체계 내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관련된 정책은 여성경력개발정책을 포함한 여성고용정책 및 복지정책 등과의 조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사회적 형평의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용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효율성만 강조된다면 저학력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는 밀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여성고용의 형평성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남녀 간 소득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동류결혼(고학력자는 고학력자끼리 결혼, 저학력자는 저학력자끼리 결혼)이라는 결혼선택 심화로 인해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회적 임금의 차원에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해주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저학력 여성지원 정책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학력 여성이 학력과 여성이라는 이중 차별에 배우자의 저소득까지 더해지는 중층적 격차를 겪게 됨을 인식하고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된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구성원 간 이질감을 약화시켜 경제전체의 생산성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저출산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이기도 하다.

■ 제안 5) 일과 보육이 병행될 수 있는 기업환경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실제 여성이 일하게 되는 공간은 기업 현장이며, 따라서 기업 현장에서 일과 보육이 병행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 개입도 이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많이 논의되고 있는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강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노동시장 보호조치의 강화 등은 30대 저학력 여성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정책들이다. 특히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는 여성 노동시간의 유연화 및 자율적 선택과 함께 할 때 정책적 효과가 높을 것이다.

관련한 정책적용은 기업의 규모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방안으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근로 시간을 나누어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령 근로시간 중 일시 퇴근하여 자녀를 별도의 보육시설에 맡긴 후 돌아와서 보충 근무를 하는 형태로 탄력적인 근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높은 보육비용 때문에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던 한계적인 여성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중 보육을 위한 일정 시간의 외출이 보장될 경우 이는 임금의 인상 혹은 보육비용의 인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업 최고경영자의 인식 변화와 관련한 직무재설계 및 인사정책의 변화가 함께 수반될 때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관련하여 제도 개선 및 우수사례 개발 및 보급, 여성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관련한 기금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IV. 기대효과

지금까지 30대 후반 고용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30대 후반 저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저조를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방향의 가장 핵심적인 기대효과는 당연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이다. 다만 앞 장에서의 정책방향이 주로 일과 양립가능하기 위한 보육 문제에 집중되었는데, 가족 돌봄에 대한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로 인해 앞으로 막대한 고령자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가 예상된다. 한국은 서구 복지국가와 다르게 아직까지 비공식적인 가족 돌봄으로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대응하고 있다. 이 경우 가족 돌봄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 제공자가 여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기존의 제도가 유지된다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자 돌봄 서비스를 보다 공식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식화는 정부에 의한 서비스 제공 방식과 시장에 의한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데 복지조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는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조되지 않았지만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절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여러 분배적 정책은 소기의 정책효과를 줄어 들고 부작용은 커지게 되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가사노동의 분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남성의 노동시간은 줄이고 여성의 일자리는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 기존 작업 관행 및 환경을 여성 노동력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여성에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회서비스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업종의 일자리 증대는 그 자체로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의 상품화를 통해 노동의 분업화를 확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촉진하게 된다.

요컨대 적절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는 보다 촉진될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다. 이는 결국 30대 고용률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금재호(2011). 『외환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박세정(2012). 「30대 후반의 고용현황, 특정세대의 현상인가?」, 고용이슈, 5권 3호, pp. 72-85.
- 박재민 · 김영규 · 전재식(2011).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이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11권 4호, pp. 29-53.
- 여성가족부(2012). 『제3차 여성기본계획』, 여성가족부.
- 이병희(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채창균(2006). 「기업규모와 청년층 노동이동」, 직업능력개발연구, 9권 1호, pp. 81-103.
- Altonji, Joseph G. and Charles Pierret(2001). 'Employer learning and statistical discrimin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6, No. 1, pp. 313-50.
- Farber, Henry S. and Robert Gibbons(1996). 'Learning and wage dynamic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1, No. 4, pp. 1007-47.
- Gibbons, Robert and Michael Waldman(2004). 'Task-specific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4, No. 2, pp. 203-207.
- _____ (2006). 'Enriching a Theory of Wage and Promotion Dynamics inside Firm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24, No. 1, pp. 59-107
- Kahn, Lisa B.(2010). 'The long-term labor market consequences of graduating from college in a bad economy', Labor Economics, Vol. 17, pp. 303-316.
- Lange, Fabian(2007). 'The Speed of Employer Learning',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25, No. 1, pp. 1-35.
- Oreopoulous, Philip, Till von Wachter, and Andrew Heisz(2012). 'The Short- and Long-Term Career Effects of Graduating in a Recess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Vol. 4, No. 4, pp. 1-29.
- Stiglitz, Joseph E.(1975). 'The Theory of Screening, Educ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5, No. 3, pp. 28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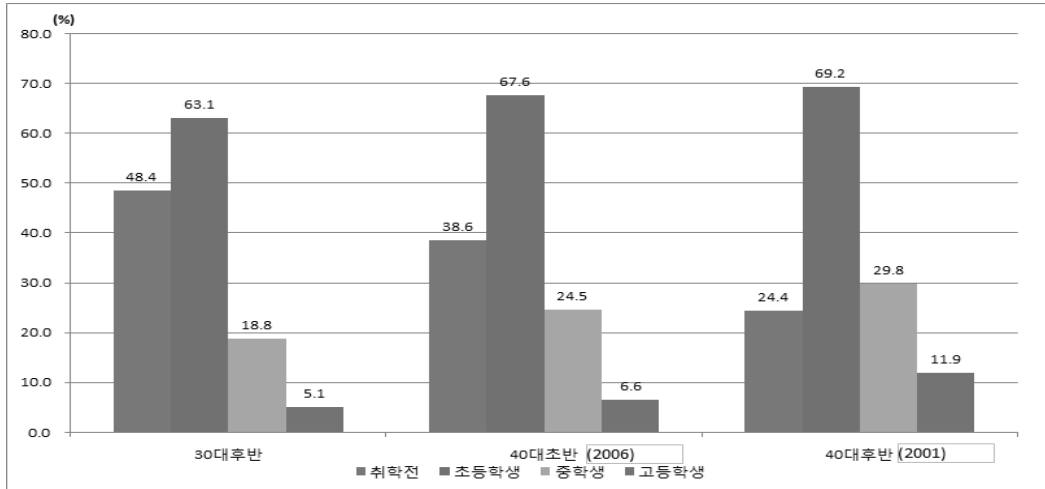
[부록]

[부표 1] 35~39세 고용률 변화의 분해(2001년~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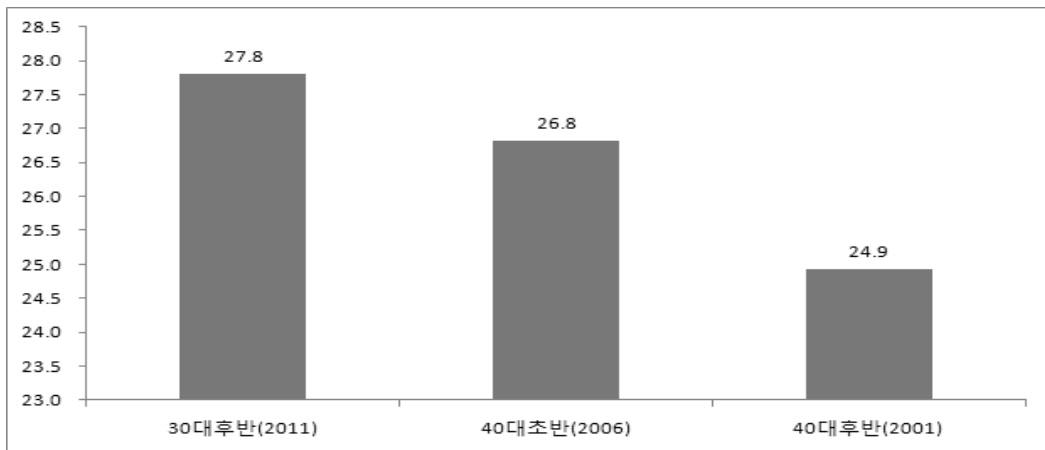
(단위: %p)

			2011	2012	증감	증감분해	
고용률			75.53	73.25	-2.28	-2.2788	
남자	중졸이하	실업률	6.02	5.64	-0.37	0.0119	
		경제활동참가율	91.56	77.82	-13.75	-0.4901	
		인구비율	6.13	1.44	-4.68	-3.7355	
	고졸	실업률	2.99	4.35	1.36	-0.2915	
		경제활동참가율	95.97	92.70	-3.27	-0.7144	
		인구비율	25.71	19.61	-6.10	-5.5475	
	전문대졸	실업률	3.18	2.69	-0.49	0.0311	
		경제활동참가율	95.27	95.73	0.46	0.0298	
		인구비율	4.25	9.08	4.83	4.4766	
	대졸이상	실업률	3.06	1.58	-1.48	0.2539	
		경제활동참가율	95.75	96.48	0.73	0.1269	
		인구비율	14.81	20.98	6.17	5.7972	
		중졸이하	실업률	3.16	3.32	0.17	-0.0058
			경제활동참가율	67.29	54.37	-12.92	-0.7193
			인구비율	10.31	1.20	-9.11	-5.3633
고졸		실업률	2.23	3.29	1.06	-0.1523	
		경제활동참가율	60.12	53.70	-6.42	-1.5742	
		인구비율	27.67	22.75	-4.92	-2.7213	
전문대졸		실업률	3.35	3.85	0.50	-0.0168	
		경제활동참가율	58.84	53.29	-5.54	-0.3203	
		인구비율	3.05	8.95	5.90	3.1893	
대졸이상		실업률	1.56	1.36	-0.20	0.0132	
		경제활동참가율	49.51	59.57	10.06	1.1919	
		인구비율	8.07	15.99	7.91	4.2522	
오차항						-0.0004	

[부도 1] 2011년 연령 기준 세대별 학교급별 자녀 보유비율과 첫 출산 연령
(가) 30대 후반 시기 학교급별 자녀 보유비율



(나) 30대 후반 시기 첫 출산 연령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부도 1] (가)는 2011년 연령기준으로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40대 후반 세 코호트에 대해서 해당 코호트의 연령이 30대 후반일 때 해당 학교급별 자녀를 둔 가구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30대 후반과 40대 초반 세대의 자료는 2011년과 2006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였다. 40대 후반 세대의 경우 2001년 자료가 필요한데, 2001년 『가계동향조사』가 전국이 아닌 도시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전국을 포괄하는 가구대상조사인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2000년의 소득과 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2001년에 행해졌기 때문에 가구관련 정보는 2001년 데이터로 볼 수 있다.

[부도 1] (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30대 후반 세대의 특징은 이전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가구의 비율이 40대 초반보다는 9.8%p, 40대 후반 보다는 24%p 높다는 것으로, 이는 늦어지는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학 전 자녀와 초등학생 자녀가 여성의 노동공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반대로 40대 이상의 경우 젊은 시절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았지만 결혼 연령이 낮아 출산과 양육 또한 현재 30대 후반보다 이른 나이에 마치고, 경제적 이유와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30대 후반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부도 1] (나)에서, 현 40대 후반을 대상으로 이들이 30대 후반이었을 당시 첫 출산 연령을 조사한 결과인 24.9세보다 현재의 30대 후반은 2.9세 정도가 늦추어 졌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데이터는 주로 기혼 여성에 대한 첫 출산 연령만이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여성의 평균 첫 출산 연령은 더욱 높을 것이다.

□ 저자 약력

- 양정승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 반가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30대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 발행연월일	2012년 8월 12일 인쇄 2012년 8월 14일 발행
· 발 행 인	박 영 범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365-8 93320
· 인 쇄 처	대한인쇄사 (02)2275-6619